

중소기업·소상공인 2題



10일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열린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반대했다.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공연

개성공단 가동중단 10년 ‘생존대책·방북승인’ 촉구

개성공단기업協, 도라산 CIQ서 기자회견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돼”
미국에 “책임있는 역할 해달라” 호소

개성공단기업인들이 전면 중단 1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에는 생존 대책 마련을, 북측 당국에는 설비 점검 등을 위한 방북 승인을 각각 요청했다. 미국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전 개성공단과 가장 가까운 남측 지역인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성공단 기업인과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호소문에서 “개성공단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최전선이었으며 사명감과 함께 ‘작은 통일’을 직접 경험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 공간이었다”면서 “우리는 개성공단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생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

소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강제 폐쇄 직후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총 8173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 확인한 피해액은 7087억원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이 가운데 1300억원이 적은 총 5787억원만 실제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식 확인액의 90%(임대자산은 100%)까지만 최소 813억 원 을 정부가 피해 기업들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또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면서 “북측 당국은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 승인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에도 “기업인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방북 승인이 진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조경주 회장은 “21세기 들어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 간 통신선 단절과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 기업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공단 폐쇄 후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공단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일하는사람 기본법 철회 5인미만 근기법 확대 반대”

소상공인聯·외식업중앙회 등 기자회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사회보험료 폭탄·연쇄파산 우려”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행동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파산을 강요하는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회장(사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돼 특고·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 추정 상 사업주는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상공인 연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를 넘어서는 액수로,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릴 경우 많은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게 소공연의 분석이다.

송 회장은 “PC방, 편의점 식당 등 초단기 알바가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 업종에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면 끊임 없는 분쟁과 수당 청구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 기사들에 대해 누가 고용주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일방적인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이크업과 인테리어 업종의 경우 예약제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업종 특성상 ‘지휘 감독’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순간 공정 관리와 안전 교육조차 임금 체불과 분쟁의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강력 반대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업계는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 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가중하는 것은 경영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충청권 기술 기반

中企벤처 성장 지원

하나은행과 200억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충청권에 있는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추가 지원한다. 기보는 하나은행과 지난 9일 기보 충청지역본부에서 ‘충청권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용 상향(85%→100%, 3년간) 등 다양한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 위치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外人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접수 받는다

중기부, 민간·신산업 외국인 인재 추천
민간기업·신산업 종사자 수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부터 민간기업 및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우수인재 대상 수시 특별귀화 추천 접수를 시작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 권위 수상, 연구실적 등이 인정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중기부는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추천기관으로 힘을 보탠다.

중기부 추천 분야는 ▲국내·외 기업 및 외투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총 4개다. 분야별 특별

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해야만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자질 및 역량, 경력의 우수성, 소속기업 내 역할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법무부에 특별귀화 신청 후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귀화 허가를 받게 된다.

중기부 조정원 창업정책관은 “검증된 글로벌 인재들이 특별귀화를 통해 단순한 체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및 혁신적인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분야 글로벌 인재는 K-스타트업 포털 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中企 10곳 중 3곳, 작년 설보다 자금사정 악화

중기중앙회, 819곳 대상 설문조사
올해 설 필요자금 평균 2억270만원
납품대금 조기회수 등으로 조달 계획

작년 설에 비해 자금사정이 나빠졌다는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많았다.

중소기업들이 올해 설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27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평균 263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8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1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9.8%로 ‘원활하다’(19.9%)보다 많았다. ‘보통’이란 답변은 50.3%였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이 82.8%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원·부자재 가격 상승’(44.3%), ‘인건비 상승’(32.4%) 등이 뒤

를 이었다.

작년 설 대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에 대해서는 ▲보통(67.5%) ▲양호(17.8%) ▲곤란(14.7%) 순으로 많았다.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유무에 대해선 ‘없다’가 86.3%로 ‘있다’(13.7%)보다 높았다.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63.4%)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대출 한도 부족(38.4%) ▲담보 요구 강화(19.6%) ▲신용대출 축소(17.9%) 등이 뒤를 이었다. 부족한 설 자금 확보계획(〃)에 대해선 ‘납품대금 조기회수’(58.0%), ‘금융기관 차입’(42.5%), ‘결제 연기’(32.9%) 순으로 응답했다. ‘대책없음’도 18.4%에 달했다.

올해 설 상여금(현금)을 주겠다는 곳은 46.8%로 ‘미지급’(40.2%)보다 다소 많았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13%였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월 지급시 기본급의 평균 50%, 정액 지급시 1인당 평균 5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